

[2010 전망⑧ - 가계부채]

2010년 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2010.1.11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목 차

1. 우리 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2. 2010년 가계부채 위협을 증가시킬 요인은 무엇인가?
3. 위협 요인에 취약한 현재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징
4. 가계를 금융위기의 희생양으로 삼은 정부와 금융기관



<http://saesayon.org>

요약

미국발 금융위기의 배경에는 미국 가계의 과도한 부채와 소득에 기반하지 않는 소비가 도사리고 있다. 2009년 한국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가계부채가 과산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 시스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수 있고, 소비의 급격한 축소가 일으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세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다른 국가들은 부채를 줄이고 저축률을 높이는 데 반해 한국의 가계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아직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부채는 서서히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다. 부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던 요인들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 2010년 한국경제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서는 두 가지가 거론된다. 첫째, 가계소득의 감소이며 둘째, 이자비용의 증가이다. 2010년 가계부채의 핵심 키워드는 부채 규모의 단순 증가가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이 될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가계부채는 두 가지 위협요인을 증폭시킬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는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게 크다는 점이다.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상승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가 입는 타격은 더욱 커진다. 둘째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3개월마다 바뀌는 91물 CD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부채의 변동성을 가중시킨다. 한편 이는 부동산 대출에 있어서 장기채권이나 주택채권 등의 정책자금은 줄어들고 CD나 은행채와 같이 은행의 시장성 수신자금이 늘어난 결과이다. 즉 부동산 시장을 은행에 맡겨놓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은행의 예대금리 차이이다. 가계 입장에서 예금 금리는 수익이고 대출금리는 비용이다. 그런데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리는 만큼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는 않다. 결국 가계가 받을 돈은 적어지고 가계가 내야할 돈은 늘어나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반대가 될 것이다.

지금의 가계부채는 2008년 말 찾아온 세계 금융위기를 지나오면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가계를 희생시킨 결과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이라는 이름으로 가계를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투기로 몰아갔다. 은행은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가계를 선택했다. 따라서 이제까지 가계를 희생양으로 삼아왔던 정부와 은행의 근본적인 경제정책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요약 끝>

1. 우리 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미국발 금융위기의 배경에는 미국 가계의 과도한 부채와 소득에 기반하지 않는 소비가 도사리고 있다. 2009년 한국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가계부채가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 시스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수 있고, 소비의 급격한 축소가 일으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세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다른 국가들은 부채를 줄이고 저축률을 높이는 데 반해 한국의 가계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소득 감소하는데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최근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운용의 취약요인으로 떠오른 이유는 2009년 2사분기 이후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림1]

2009년 개인부문 금융부채 증가 추이



* 증감률은 전기 말 대비

* 출처 : 한국은행 '2009년 3/4분기 자금순환동향(잠정)' 자료 사용

2009년 3사분기 현재 개인부문 금융부채 총액은 836조 8천억 원이다.¹⁾ 같은 기간

1) 한국은행, '2009년 3사분기 자금순환 동향(잠정)', 2009.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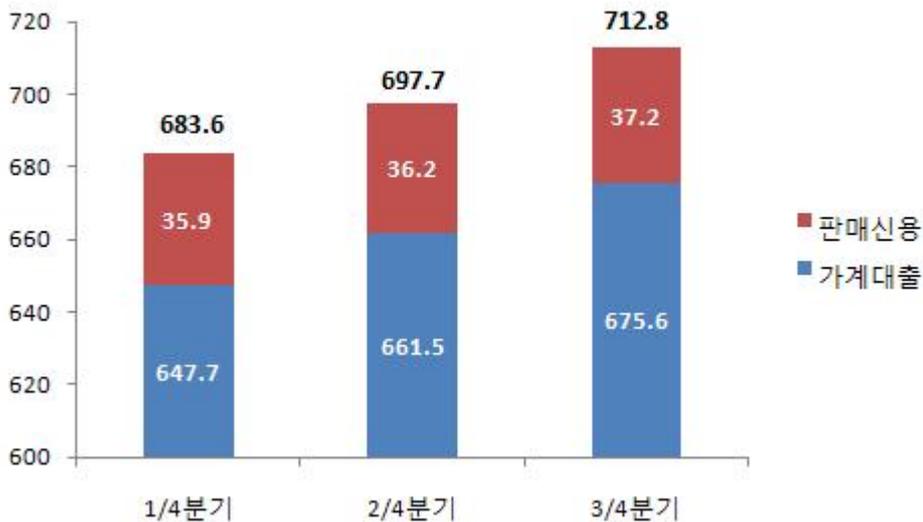
금융부채는 순수 가계 외에 소규모 개인기업이나 민간 비영리 단체까지 포함하며,

가계신용 잔액은 712조 8천억 원에 이른다. 가계신용 잔액이란 가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으로 대표되는 ‘판매신용’을 뜻한다. 가계대출이 95퍼센트 정도, 판매신용이 5퍼센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사상 최초로 700조를 돌파한 결과 한 가구당 약 4213만 5215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²⁾

[그림2]

2009년 가계신용동향 증가 추이

(단위: 조 원)



* 출처 : 한국은행 '2009년 3/4분기 가계신용동향' 자료 사용

■ 이자 비용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의 빠른 증가

가계대출을 대출 기관별로 나눠 살펴보면³⁾ 비은행 예금취급기관⁴⁾의 증가율이 가장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금은행의 대출 증가폭은 3사분기 4조 7천억 원으로 전기에 8조 2천억 원이 늘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규모이다.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⁵⁾의 경우 3사분기 증가폭은 각각 5조 5천억 원과 3조 9천억 원으로 전기에 각각 2조 9천억 원과 2조 7천억 원이 늘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기관 외에 정부나 주변 친인척에게 빌린 돈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가계신용과 다르다.
 2) 2009년 통계청 추계 가구수 1691만 6966 가구 기준.
 3) 예금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405조 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빌린 돈이 133조 원, 기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136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
 4)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신탁회사 등
 5)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업체

2. 2010년 가계부채 위협을 증가시킬 요인은 무엇인가?

정부는 아직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부채는 서서히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다. 부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던 요인들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 2010년 한국경제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서는 두 가지가 거론된다. 첫째, 가계소득의 감소이며 둘째, 이자비용의 증가이다. 2010년 가계부채의 핵심 키워드는 부채 규모의 단순 증가가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이 될 것이다.

■ 가계소득의 감소

우선 가계 소득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른 때보다 심각하다. 특히 현재의 소득 감소는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라는 근본적 대책이 실현되지 않는 한 개선되기 힘들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3사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45만 6천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퍼센트가 감소했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실질로 따졌을 때는 3.3퍼센트가 감소했다. 가계소득은 2008년 3사분기 이후 계속해서 증가율이 낮아졌다. 그러다가 2009년 2사분기에 -0.1퍼센트로 소득의 절대액수 자체가 감소하더니 이번 3사분기에도 -1.4퍼센트를 기록하며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의 감소율이며, 명목소득의 절대액수 자체가 줄어든 것은 2009년 2, 3사분기가 유일하다.

가계소득의 약 66퍼센트를 차지하는 근로소득⁹⁾은 전년 대비 -0.3퍼센트 감소했다. 2008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폭이 줄어들더니 2009년 3사분기에 들어서 드디어 절대액수 자체가 감소했다. 근로소득의 감소는 최근의 일자리 감소와 임금 삭감으로 인한 결과이다. 2009년 3사분기에 정부의 희망근로를 제외하면 전년에 비해 대략 2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또한 노동부 협약임금 인상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 임금 인상은 3월에 1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9월에는 1.5퍼센트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8년 평균 임금인상률이 4.9퍼센트였다는 점과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임금은 줄어들었다.¹⁰⁾

이러한 소득의 감소를 반영하듯이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자금을 빌리는 가계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빌리는 자영업인이 늘어난 것도 대출 증가의 한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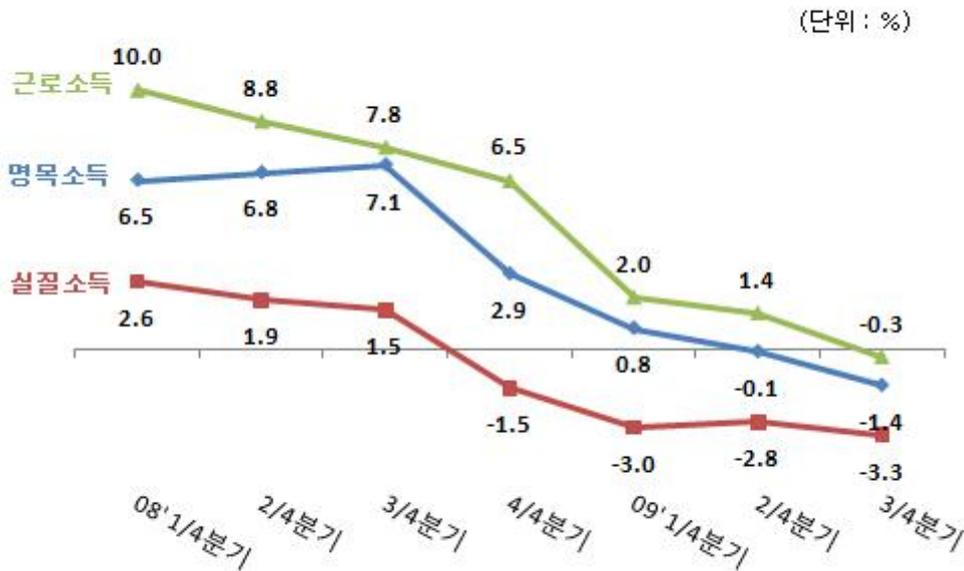
9) 통계청의 '2009년 3사분기 가계동향'에 의하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 345만 6천 원 중 근로소득은 227만 6천 원으로 65.9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한다.

10) 3사분기 가계동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글 참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가계소득 줄고, 소비 늘고...경기회복은 먼 이야기', 2009.11.16

이 되고 있다. 2009년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자금 및 사업자금 용도의 대출 비중이 평균 50퍼센트 수준으로 추정되어 과거 주택가격 상승기 동안 20퍼센트를 하회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¹¹⁾ 이들의 경우 이미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가 아니라 소비를 위해 대출했다는 점에서 상환능력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5]

분기별소득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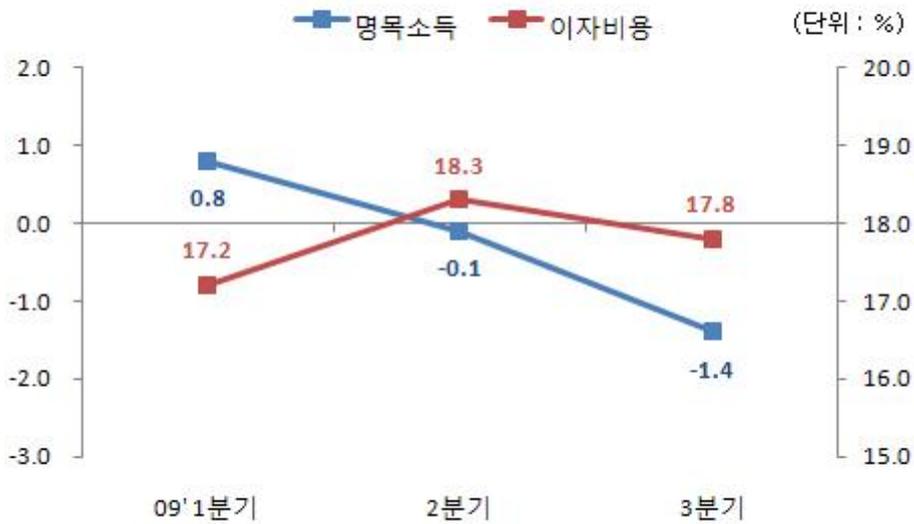
*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
* 출처 : 통계청 '2009년 3/4분기 가계동향' 자료 사용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가구당 이자 지출액은 59만 8천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8퍼센트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자 지출액을 약 60만 원으로 보고 전체 가구수를 약 1700만 가구로 보면 같은 기간 전체 가구에서 이자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10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이같은 소득 대비 이자부담률의 상승은 특히 소득분위 중간계층, 소위 말하는 중산층 가계에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많기 때문에 이자의 증가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저소득층의 경우 아예 대출을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11)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출구전략 논쟁 : 과유불급', 2009.8.12

[그림6]

2009년 소득 감소와 이자비용 증가 추이



*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
* 출처 : 통계청 '2009년 3/4분기 가계동향' 자료 사용

■ 지속적인 금리 상승

다음으로 소득 감소라는 근본적 문제 외에 가계부채 상황을 더 긴박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 바로 시중 은행의 높은 대출금리인데, 앞으로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큰 문제이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은 2008년 8월 5.25퍼센트였던 기준금리를 점차 낮춰서 2009년 2월 2퍼센트로 대폭 낮춘 후 현재까지 11개월째 동결하고 있다. 역사상 최저금리이다. 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11월에 6.00퍼센트로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5.87퍼센트, 신용대출의 경우 6.25퍼센트에 이른다. 10월의 경우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무려 6.37퍼센트까지 올라갔다.¹²⁾ 지난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9년 1월에서 11월 동안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5.71퍼센트에 달하여 같은 기간 평균 연 2.0퍼센트였던 기준금리와의 차이, 즉 가산금리가 9년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12) 한국은행, '2009년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2009.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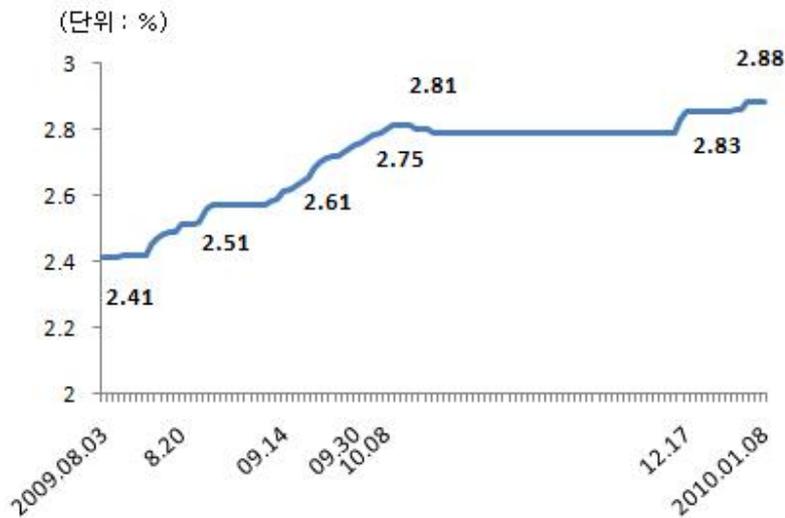
[표1] 2010년 1월 주요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금리(%)	인상폭(%p)
국민은행	4.82~6.12	0.01
신한은행	4.86~6.06	0.07
우리은행	5.46~6.48	0.07
하나은행	4.36~6.16	0.07
외환은행	5.10~6.65	0.07

그렇다면 CD금리는 왜 상승하는 것일까? CD는 은행이 보유한 예금을 담보로 하여 발행한 채권이라 볼 수 있다. 예금 수신 외의 자금을 조달해야 할 때 발생하게 된다. 최근 은행들이 과도한 대출경쟁과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CD를 많이 발행하게 되었고, 물량이 증가하여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다보니 금리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은행들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이 금리를 통해 가계로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그림8]

CD금리 증가 추이



3. 위협 요인에 취약한 현재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징

정부가 아직 가계부채를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몇 가지 지표를 제시한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지표인 LTV가 2009년 7월 말 47.1퍼센트로 미국의 74.9퍼센트나 영국의 85.2퍼센트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¹⁴⁾ 국내총

14)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14호)’, 2009.11.19

생산(GDP)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2007년 말 기준 82퍼센트로 미국과 영국의 100퍼센트나 호주의 98퍼센트보다 낮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2008년 말 기준 47.8퍼센트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가계자산 중 과도한 부동산 비중

[그림9]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 증가 추이



* 2009년은 1/4분기 기준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없나' 자료 사용

하지만 가계자산 중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 2006년 기준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83퍼센트로 미국의 58퍼센트, 호주의 68퍼센트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다.¹⁵⁾ 만약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도 자산의 8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은 제 때에 처분되지 않는 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오히려 각 가계에서 이자비용 마련을 위해 부동산 매물을 내놓을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문제는 더욱 가중된다. 이런 위험도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인데, 2009년 1사분기에 142.3퍼센트를 기록했다.¹⁶⁾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소득보다 금융부채가 1.4배 이상 많다는 뜻이며, 소득이 5천만 원이면 빚은 7천만 원이라는 뜻이다.

15) 매경이코노미, 2009.12.16(1535호)

16) 삼성경제연구소,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없나', 2009.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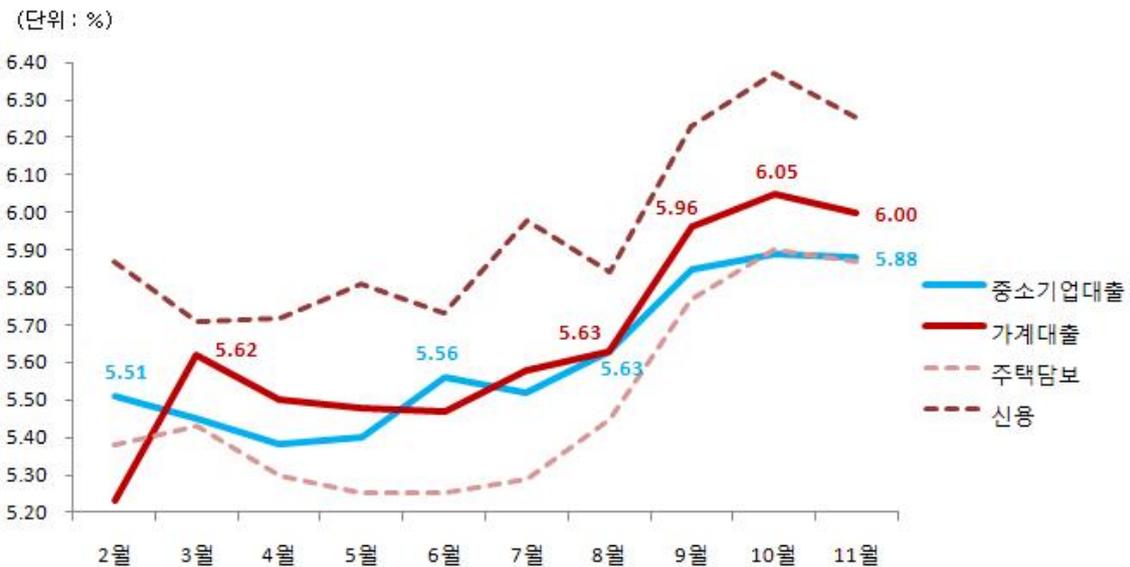
■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서 금리변동에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90퍼센트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고 이의 대부분이 91물 CD금리연동형 대출이다.¹⁷⁾ 91물 CD금리는 3개월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와 연동된 대출금리 역시 변동성이 커지고, 은행들이 CD금리를 올릴 때마다 그대로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진다. 원래 변동금리는 변동성이 심하다는 면에서 고정금리보다 1퍼센트 포인트 정도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CD금리와 가산금리 상승이 급격해지면서 둘이 뒤바뀌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등의 경우 고정금리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변동금리가 CD나 은행채와 같은 은행의 시장성 수신자금과 연동되는 것이라면 고정금리는 국채나 주택채권 등 정부 차원의 정책자금과 연동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가 늘어나고 고정금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부동산 대출에 투입되는 자금의 성격이 정책자금이 아닌 은행의 시장성 수신자금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라는 민간에게 넘겨준 셈이다.

[그림10]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



* 기준금리가 2%로 결정되고 유지된 2009년 2월부터 11월까지 변동 상황
* 주택담보와 신용은 가계대출 중 일부

17) 매경이코노미, 1009.12.16(1535호)

4. 가계를 금융위기의 희생양으로 삼은 정부와 금융기관

또 한 가지 짚어보아야 할 것은 예대금리 차이이다. 가계 입장에서 예금금리는 수익이고, 대출금리는 비용이다. 그런데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는 만큼 예금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즉 가계가 받아야 할 예금금리는 줄어 들고 가계가 지불해야 할 대출금리만 늘어난 것이다. 가계 입장에서는 손실이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실제 시중 은행은 2009년 3사분기 이자 이익으로 전기보다 6천억 원 증가한 7조 8천억 원을 벌었다.¹⁸⁾ 주목할 것은 이 기간 동안 은행의 가계대출은 4조 7천억 원으로 전기의 8조 2천억 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체 이자 이익은 증가했다는 점이다. 은행이 대출 규모를 줄이는 대신 금리 차이를 높여서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한국은행 출구전략을 고민하면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은행의 예대율 규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개별 은행 역시 대출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대율 100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예금수신을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금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손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역시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가계대출이 1사분기에는 6조 원, 2사분기에는 6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가계는 2010년 상반기에만 12조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¹⁹⁾ 2009년보다 가계대출 규모가 1.2퍼센트 늘어나고 대출금리는 1사분기에 5.80퍼센트, 3사분기에 6.00퍼센트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산정한 예측이다.

결국 정부도 은행의 금리인상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나섰는데, 앞서 언급했던 예대율 규제 강화와 함께 가산금리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CD금리를 대신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산금리 공시의 경우 이제까지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아야만 알 수 있던 가산금리를 공시하여 국민들이 이를 보고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눈치보기를 통해 담합 아닌 담합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방식 변경의 경우, 현재 은행의 평균 조달금리가 대체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더라도 지금처럼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에 따

18)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09년 1~9월중 영업실적(잠정)', 2009.11.2

19) 한겨레, 2009.12.23

라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해버리면 소용이 없게 된다.

최근의 가계부채는 개별 가계들의 씹씹이가 해피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말 세계 금융위기를 지나오면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가계를 희생시킨 결과이다.

2008년 말부터 정부는 경기부양이라는 이름으로 대폭적인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단행했고,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부동산 시장을 띄웠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되자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가계는 늘어났다. 그러다가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증가하자 정부는 2009년 7월에 들어서야 LTV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가계는 대출 이자 부담과 부동산 폭락을 우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돈을 풀고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그것이 소비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금융기관은 금융위기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타격을 입었다. 이는 그동안 예대율을 훨씬 뛰어넘는 무리한 투자,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한 투자를 해온 결과이다. 은행은 잃어버린 수익을 회복하기 위해 더욱 안전한 수익처를 찾았고 그것이 바로 가계였다.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행이 가계에 주택담보대출을 주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은행은 가계대출 확대에 앞장섰다. 대신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은 줄였다. 은행의 이런 얄미운 행태 때문에 중소기업은 자금을 구하지 못해 쓰러져 갔고, 가계는 결국 막대한 부채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보았던 CD금리의 상승 역시 은행이 무리한 대출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을 가계로 떠넘긴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히 금리책정방식을 변경하는 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까지 가계를 희생양으로 삼아왔던 정부와 금융기관의 경제정책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가계경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경제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다.²⁰⁾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국가부도 상황에 직면한 정부를 위해 금반지를 빼주었고, 은행의 회생을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해주었다. 그런데 정부와 금융기관은 가계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펀드 가입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식투자를 해야 한다고 부추긴 것은 누구인가? 경제정책을 잘못 사용하거나 경영을 잘못된 것은 정부와 금융기관인데 왜 결국

20)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 2010.1.5

책임은 가계의 몫으로 돌아오는가? 2010년 성장률 4~5퍼센트,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의 장밋빛 소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